

대한민국 의료 새판짜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관리학

지난 의사파업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민낯을 보여줬다. 전공의는 처음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웠다. 의대생은 국가고시 거부로 힘을 보탤고 교수들은 뒷배 역할을 자임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쉽게 환자 곁을 떠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깨달았다. 의사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국민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고 생각했다.

의사파업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오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다. 의사수를 늘리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당한 데 대한 분노도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공감할 사기 어려웠다.

이번 의사파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허약한 민낯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공의가 파업을 하자 대형병원은 거의 멈춰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운 전공의 파업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법과 제도는 없었다. 의료 공공성의 최후 보루인 공공병원들은 규모가 너무 작았고 그 수도 적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비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대신하지 못했다.

의사파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도 봤다. 정부는 의사집단의 파업 앞에 백기투항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왜 국민을 든든한 뒷배로 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정말 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하게 된다.

'의료기술자' 아닌 '의사선생님' 길러내야

의사파업에서 환자들은 버려졌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았다. 수술할 날을 받아 놓고 손꼽아 기다리던 암 환자는 언제 입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체계는 환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새판을 짜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를 늘리자는 정책을 막아선 의사들의 파업은 역설적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왜 강화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의사파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멈춰서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엘리트 의식에 취한 '의료기술자'가 아닌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 줄 아는 '의사선생님'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크게 고쳐야 한다.

먼저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 지역 출신을 뽑아야 한다. 질병과 의학지식에 매몰된 병원 중심 단편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환자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골병원에서도 근무해보고 왕진도 가면서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를 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의료기술자'가 아닌 '의사선생님'을 원한다면 그런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의학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해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환자 진료료를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운영방식을 바꿔서 공공병원 의사들이 병원 수익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을 고쳐서 민간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 통해 결정

마지막으로 의사수를 늘리는 것처럼 중요한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사는 물론 시민과 환자, 기업과 노조,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직종의 의료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을 고쳐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할 위원회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의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임무로 명시할 수 있다.

의사들도 파업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는 정책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진 결정은 우리 모두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